

05

서민층의 무거운 이자부담을 낮추다.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24% → 20%)

 **추진부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 031-8008-5060



개선배경

- 대부업 시장은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추세이나, 연체율이 상승하고 피해 상담·신고가 증가하는 등 서민층 부담은 지속되고 있음
- 고도성장기인 '70년대 최고이자율(25%)과 비교할 때, 현재의 대부업 최고이자율(24%)은 저성장·저금리 시대인 점을 감안하면 과도하게 높음

[이자율에 관한 규정]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 연 100분의 24, 민법 제379조 연 5분, 상법 제54조 연 6분

※ 대부업법 이자율 관련 규정(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등)

☞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통해 서민층 이자 부담을 완화



개선내용

개선전

→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규정

개선후

→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
※ 경기도 법정 최고금리 10%로 인하 건의



추진과정

- '20.06.05. 법정 최고금리 인하 관련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건의(→금융위원회)
- '20.07.09. 국무총리 주재 현장간담회시 건의
- '20.07.28.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회의시 건의
- '20.08.07.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및 국회의원 대상 도지사 서한문 전달
- '20.11.02.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협의회 현안 건의
- '21.03.30.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21.07.07. 대부업법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행



개선효과

- 경기침체 지속으로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금융취약계층의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21. 7. 7.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어 시행



보도자료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를 1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2020.11.16 jeong@yna.co.kr

이 지사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발생할 불법 사금융 이용 등 부작용 우려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최고금리를 낮추면 불법 사채시장 폐해가 있다지만, 국가가 불법을 보호할 필요는 없다"며 "이자제한법 위반 대출은 불법이니, 이자나 원리금 반환을 불허해야 하고(독일 또는 일본), 그렇게 하면 유충업소 신불금 반환을 불허하자 신불금이 사라진 것처럼 불법 사채는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자를 인하와 불법 대부 금지로 돈이 필요한 서민은 대출받을 길이 막힌다는 주장도 옳지 않다"며 "최고 24%의 고리대금 이용자 약 200만명의 평균 대출액은 약 800만원이고 평균금리는 20%대로, 이들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최대 1천만원을 연 2%대 장기대출 기회를 주는 경우 그 손실을 연간으로 분산하면 매년 부담액은 크지 않다"고 했다.

이 지사는 "성장을 10%대 박정희 시대에도 최고금리는 25%였는데, 0%대 성장 시대에 성장률의 20배가 넘는 24%나 20%까지 허용하는 것은 문명국가인지 의심케 한다"며 "화폐 발행권의 원천이 국가권력, 즉 국민인 시대에는 국민주권 원리상 국가 신용이익을 소수 부자만이 아닌 다수 빈자까지 '일부나마' 누리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법정 최고금리 연 24→20%로 인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일 현행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4%p 인하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당정협의의 진행한 결과, 최근 저금리 기조와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최고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이 같이 발표했다.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에 대한 과도한 이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지난 3월 말 기준 20% 초과 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 중 87%가량인 208만명(14조2천억원)의 이자 부담이 매년 4천830억원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나머지 13%에 해당하는 31만6천명(2조원)의 경우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중 3만9천명(2천300억원)은 불법사금융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저신용자의 금융 이용 감소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햇살론 같은 저신용자 대상 정책저금상품 공급을 연간 2천700억원 이상 확대

법정최고금리 연 20%로 인하

○ 최고금리 인하 추이



○ 이자부담 경감 예상



당정, 시행령 개정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서민금융상품 공급 연간 2천700억 확대
李 지사 "인하 환영, 기본대출로 나아가야"

할 예정이다.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저신용 서민 대상 신용대출 공급 모범업체에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정협의의 모두발언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로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

고 있지만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의 대출 가능성을 없애버릴 수 있다는 위험이 있지만 지금은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인하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나쁜 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하 수순과 방식, 시기, 보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한 당정 결정에 "살인적 고금리를 4%p 낮춘 것만도 큰 진전이며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의 금융정책이 고객을 신용도에 따라 나누어 관리하면서 돈이 필요한 자는 빌릴 수 없고, 빌릴 수 있는 자는 빌릴 필요가 없어,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어도 돈이 돌지 않고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라며 "서민이 살고 나라가 살려면 대출이자율을 더 낮춰야 하고, 불법대부를 무효화해야 하며, 모든 사람의 금융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본대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이광희기자